지역 국회의원들 "추석 민심 잡아라"

박주선 의원 등 총리 인준 표결 끝나자 일제히 귀향

복지시설·재래시장 등 돌며 귀성인사·민생탐방 돌입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은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이 끝나자 추석 민심을 다지기 위해 이번 주 일제히 귀향 활동에 들어간다.

특히 이번 추석 연휴는 일정이 짧을 뿐 아니라 국정감사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 서울과 지방을 오가며 바쁜 추석 주간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다.

의원들은 이 기간 동안 주로 지역구 내 소외층을 둘러보고 주민들에게는 여권의 총리 임명동의안 처리 강행의 부당성을 적극 홍보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최고위원인 박주선 의원(광주 동구)은 28일 "30일 국정감사를 위한 워크숍이 끝나는 대로 광주로 찾아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지역구 18개 복지원과 경로당 등을 방문, 추석 인사를 한 뒤 남광주시장과 대인시장 등 재래시장을 둘러볼 계획. 또 원로당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다음달 2일 귀경할 계획이다.

전남도당 위원장인 주승용 의원(여수을)은 다음달 1일 광주에서 있을 방송토론회에 참석한 뒤 바로 여수로 향할 계획이다. 이후 경로당과 불우시설을 둘러보고 주요 당직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 연휴 마지막 날인 4일 오전 귀경할 예정이다.

서갑원 의원(순천)은 30일 워크숍 직후 순천으로 내려가 10월1일 순천 웃장과 역전시장, 2일엔 순천아랫장과 경로당·지역아동센터 등을 찾을 계획이다. 민생의 구석구석을 살펴보고 민심의 향방을 주의 깊게 살펴볼 예정이다. 3일 오후 귀경한다.

광주 서구갑 조영택 의원도 역시 30일 의원워크숍 직후 광주로 갈 계획이다. 지난 주말 경찰서와 소방서 등을 시찰한 관계로 추석 기간 동안에는 경로당 등 불우시설을 방문, 위로할 예정이다.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 2일 귀경한다.

김재균 의원(광주 북을)도 30일 지역구로 향한다. 다음달 1일엔 노인복지회관과 장애인 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한 뒤 파출소와 소방서 등 민생 기관을 방문해 근무자들의 노고를 위로할 계획이다. 또 2일엔 첨단산업단지를 방문, 연휴에도 근무 중인 근로자들을 위로하고 추석날인 3일에는 지역별로 벌어지는 소규모 축제행사를 돌며 지역구민과 접촉한 뒤 4일 오후 귀경할 예정이다.

광주 광산을이 지역구인 이용섭 의원 역시 오는 30일 광주로 내려 간 뒤 다음달 2일 귀경한다. 광주에서는 경로당 등 불우시설과 비아 재래시장 등을 방문, 민생을 챙기고 이명박 정부의 실정과 정운찬 총리 후보자의 임명 부당성을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결산 소위 위원인 김영록 의원은 결산 심사가 한창이어서 다른 의원들보다 지역구를 늦게 찾는다. 다음달 1일 저녁에나 귀향, 노인정 등 불우시설과 경찰서·소방서 등 주요 기관을 찾아 민생을 챙긴다는 계획이다. 해남·진도·완도 등 3개 군이 지역구에서 누구보다도 바쁜 일정을 보내야 하는 김 의원은 추석을 지내고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 3일 저녁 귀경할 계획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광태 광주시장, 복지시설 위문 박광태 광주시장이 28일 장애인 복지시설인 북구 지야동 '예수 마리아 요셉 부활의 집'을 방문해 원생들을 위로·격려하고 있다. 박 시장은 이날 여성미혼·모자시설인 우리집, 노인 복지시설인 주월의 집 등도 둘러봤다. 〈광주시 제공〉

광주시 토지총액 10년간 1.4배 올랐다

경기도 4.3배⬆…광주 동구는 오히려 14.4%⬇

지난 10년간 광주·전남지역 토지가격이 전국에서 가장 낮게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한나라당 유정복 국회의원이 국토해양부로부터 받은 전국토지총액 변동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전국의 토지총액은 3천227조원으로 IMF 때인 1998년 1천333조원의 2.4배가 됐다.

지역별로 토지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광역단체는 경기도로 이 기간 동안 4.3배가 됐으며 반대로 광주광역시는 1.37배에 그쳐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지역에서 같은 기간 동안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경기도 화성시로 5.7배가 됐으나 강원 속초시는 1.3배밖에 되지 않으면서 가장 적게 올랐다.

군 지역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개발되고 있는 충남 연기군이 10년 동안 5.0배로 토지가격이 가장 높게 올랐으나 구례군은 불과 1.3배로만 올라 가장 낮게 올랐다.

토지 변동 하위 10개 지역에는 구례군 외에 강진군(1.4배), 영암군(1.5배), 장흥군(1.5배) 등이 포함됐다. 반면 무안군은 3.2배로 뛰어 상위 10위에 올랐다.

또 구 지역에서는 인천 연수구로 무려 6.5배가 됐으나 광주 동구는 오히려 10년 전 토지 가격의 86.6%에 불과하는 가격으로 14.4% 하락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中 국경절 열병식때 최신형 미사일 공개

중국은 10월1일 건국 60주년 기념 국경절 열병식에서 핵탑재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비롯한 최신형 미사일 108기를 처음으로 선보인다.

중국 신화통신은 27일 위지쉰 인민해방군 제2포병 부사령관 겸 열병연합지휘부 부총지휘관의 말을 인용해 이번에 공개하는 미사일은 모두 최신형이라며 이같이 보도했다.

위 부사령관은 "이번에 공개하는 미사일은 지대지 미사일 2종, 크루즈 미사일, 핵이나 재래무기 탑재가 가능한 지대지 중장거리 미사일, 핵탑재 대륙간탄도미사일 등 5종"이라고 말했다.

그는 "열병식에 참가하는 5개 종류의 미사일은 모두 108기에 달한다"면서 "이전 열병식 당시 각각 12기와 36기를 공개한 것과 비교하면 공개 수량이 크게 늘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들 5개 종류의 미사일은 모두 고체 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크기가 작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황새마을 선정, 해남 탈락 재검토를"

민주당 조영택 의원 "평가방식·기준 등 부정확"

지난 6월23일 문화재청이 실시한 황새마을 조성사업 적합지 선정이 '부실투성이'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시 문화재청은 충남 예산군, 서산시, 경기 여주군, 해남군 등 4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와 전문가 실사를 거쳐 예산군을 황새마을로 최종 선정했으며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사업비로 14억2천800만원이 책정됐다.

하지만, 민주당 조영택 의원(광주 서구갑)은 28일 황새마을 선정이 ▲공모방식 부적절 ▲평가기준 불합리 ▲평가방식 중 특정인 영향력 배제 부실 ▲사업계획서 사실관계 확인 미흡 등으로 부정확했다고 지적하고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우선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공모방식이 부적절하다고 평했다. 천연기념물 황새를 복원, 번식시키는 장소의 선정은 과학적 조사와 평가를 통해 복수의 지역을 선정했어야 한다는 것. 하지만, 문화재청은 공모를 통해 신청한 4개 지자체만을 대상으로 심사했으며 황새서식에 유리한 조건을 갖춘 지역을 발굴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조 의원은 또 평가기준 중 서식지 적합도는 전문가의 평가가 필요없는 단순한 기준에 따라 배점을 부여함으로써 오히려 전문가의 견해를 차단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문화재청이 서식지 적합도 평가항목으로 황새서식 여부(40점)·주변환경(20점)·해안까지의 거리(10점)·하폭 100m 미만 하천과의 거리(10점)·하폭 100~300m 미만 하천과의 거리(10점)·면적 300ha 농경지까지의 거리(5점)·표고(5점) 등 7개 항목을 정해 심사위원들의 전문가적 식견을 차단했다는 것이다. 때문에 서식 방해 요인이 가장 높은 예산군(-18점)이 선정되고 방해요인이 하나도 없는 해남군(0점)은 탈락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박지경기자 jkpark@

"주민 정서 무시, 무안반도 통합 반대"

무안·신안군의회 공동성명

무안군의회와 신안군의회가 무안반도 통합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양 지역 의회의 통합반대 의견을 공식화했다.

그러나 애초 양 지역 군의원들이 모두 참석하기로 했으나 의장 2명만 발표장에 나온 데다 기자회견도 성명서만 낭독한 채 질의응답 시간도 없이 10분만에 끝나 빈축을 샀다.

무안·신안군 의회는 28일 오전 무안군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목포·무안·신안 통합반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 지역 의회는 성명에서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정략적인 의도하에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시·군 자율통합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며 "지방자치의 발전을 후퇴시키는 시·군 통합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애초 무안군의원 7명, 신안군의원 10명이 모두 참석한다고 예고됐으나 의장 2명만 참석하는 것으로 당일 변경돼 통합반대 입장 표명을 놓고 군의원들 간에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이날 통합 반대 의견 공식발표는 명쾌한 입장 설명 없이 끝나는 바람에 통합을 둘러싼 지역 간 대립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더욱 큰 논란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신안=조완남기자 wncho@
/무안=김민준기자 jun@

"한인 실종자 3명 생사 확인중"

比 교민사회 태풍 피해 파악·복구에 부심

필리핀 북부를 강타해 폭우와 산사태를 야기한 태풍 켓사나로 인한 사망자수가 계속 늘고 있는 가운데 메트로 마닐라시티 등 피해지역에 거주하는 한국 교민들도 실종자 파악 및 복구작업 등에 여념이 없다.

필리핀 주재 한국대사관(대사 최중경)에 따르면 28일 정오(한국시간) 현재 이번 태풍으로 모 치과대학에 재학 중인 허모(25)씨 외에는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허씨는 전날 오후 6시15분께 수도 마닐라 시내 'SM쇼핑몰' 인근 전봇대 부근에서 쓰러져 있는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검진 결과 감전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됐다.

대사관의 김경철 영사(교민 담당)는 "한인회와 함께 피해접수를 받은 결과 28일 정오까지 추가 사망자는 없으며, 피해가 심한 메트로 마닐라시티 북서부 안티플루에서 학생 두명과 여성 한명 등 세명을 포함해 모두 다섯명이 실종됐다는 신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